

정청래 전 대표, 오늘 전주시 당원 결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

17일 민주 전당대회 앞두고
전주대서 대규모 결집대회
당대표 경선 중반 세몰이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완성
전북 발전 위한 비전 제시

오는 1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15일 호남권 당원 전당대회에 앞두고 10일 전주에서 대규모 당원 결집대회를 열고 전북 민심 공략에 나선다.
정 후보는 10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전북 당원 결집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전북당원주권시대'가 주관하며, 전북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전북여성비전포럼,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정청래1인당대오, YES! 정청래 사람들, 정청래+이재명 황금조합 등



민주 도당 청년 권리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도전지원사업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권리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함께 참여해 세를 결집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공약으로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관련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광역교통망 구축 △인재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 등을 약속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전북과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19만4,000여명의 권리당원이 있어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광주 전남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집대회는 당대

표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당심의 향배를 가늠할 주요 일정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주 당원 결집대회가 정 후보의 전북 지지층 확대와 함께 경선 후반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오는 17일 치러지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민과 더 가까운 행정 실현

도, 이번주 도정 주요일정 발표... 도청 청사 개방
시군 상생 발전 정책 라운딩 · 광복절 경축식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더욱 가까운 행정을 실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해 8월 둘째 주 주요 도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청사 개방을 통한 열린 행정, 첨단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역사·보훈 문화 확산, 생활 안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청 이철규 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할 주요 도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민선 9기의 핵심 가치인 '도민 중심 행정'과 '체감 성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도청 청사의 개방이다. 전북도는 10일부터 스피드게이트를 평시에도 개방하도록 청사 출입 운영 규정을 개정해 운영한다.
방문증 발급 규정을 폐지하고 청원경찰의 임무도 조정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도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춰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유등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연금공단 사회공헌기금 3천만 원을 활용하여 순창지역 주민 불발 서비스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간 협력도 강화된다. 13일부터 이틀간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도지사과 시장·군수, 도·시군 간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하는 상생 발전 정책 라운딩을 열어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육

성도 본격화된다. 11일에는 군산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12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투자기업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헬프스탑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산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13일에는 도내 5개 대학과 전북현대모터스 FC가 함께하는 'Drive up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대학생들의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광복절을 맞아 보훈 행사도 이어진다. 전북도는 생존 애국지사를 위문하고, 15일에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해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세계 청년대회 사전 행사도 함께 열려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 행정도 강화된다. 소방분부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소방 행정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은 산업훼손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용주차구역 합동점검과 공공 석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실시해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맞춰 구급차 이송처치 기준을 변경하고 GPS 기반 운행 관리 체계를 도입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철규 대변인은 "이번 주간 도정 계획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청사 개방을 통한 열린 행정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지원, 안전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이번 도정 계획은 민선 9기 전북도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만호기자

“예술인복지기금 운영 여부 조속 결정해야”

김성수 도의원 “3년째 기금 조성 ‘0원’... 존속기한 흘러보내선 안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소방위원회 김성수 도의원(고창·이)이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기금 조성이나 운영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은 예술인 특례보증을 비롯해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금은 실제 조성되지 않았고, 조례상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흘러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협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는 같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예술인

복지기금을 실제 조성해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기금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의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을 실제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도정 방침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2027년까지인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 계획, 지원사업 및 운용체계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의 예술인 복지정책이 선안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술인복지증진기금 등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재원 확보와 사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2026
전북청년 피스톤 참가자 모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김영복, 청년위원장 김종덕)는 청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26 전북 청년 피스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며, 지역사회의 청년들의 평화통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팀으로 3-5명),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는 '2026 전북 청년 피스톤'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참가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상 150만원 등의 수당이 마련되어 있다.
참가 신청은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공식 블로그 및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북지역회의 사무처(063-280-3106)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의회 의장단
무주경찰서와 간담회

무주군의회 의장단과 무주경찰서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치안강화를 위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과 오순덕 부의장은 지난 7일 무주경찰서에서 김은희 무주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문자미참회(이상동기범죄)로 생긴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무주군의회 의장단과 무주경찰은 이 자리에서 범죄 예방용 CCTV 확충과 관리 체계 통합, 이상동기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 치안 강화 정책을 적극 펼쳐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범촌 지역치안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여 무주 치안에 필요한 사항들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주=손홍기기자

경찰·해경 수사 공정성·민주적 통제 강화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청·해양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현행 예규의 신청 기간·반려 규정을 삭제해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췄다.
수사 개시 이후부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종결 후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증거나 증거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 90일이 지나도 재신

청이 가능하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수사심의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 조사 완료, 7일 이내 진행 상황 통지를 의무화해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내부·외부위원 혼합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경찰과 해양경찰의 확대된 수사권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정읍=김대환기자

남원시의회, 국가 공공의료 거점 구축 촉구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는 지난 7일 오전 남원시사회운동본부, 국립의정원유치 남원시민연대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설립 촉구 공동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회 정문에서 참석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설 신속 및 국립의정원 서울

배치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지방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채택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 △국립의정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의 남원



조속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